

국토이슈리포트

제 6호

2019년 5월 2일

| 발행처 | 국토연구원 www.krihs.re.kr | 발행인 | 강현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대책연구원로 5

미국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요약

미국 민주당이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Net Zero)를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 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논쟁 촉발

- 2019년 그린뉴딜 담론의 재부상은 과거 오바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기초하므로 현재의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 오바마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분석 필요

오바마 정부는 핵심경제부문인 에너지·수송·건물·인적자본에 대한 예산투입, 규제, 인센티브로 그린뉴딜 정책 실행

- (에너지)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대출보증 등 간접적 개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촉진
- (수송) 전기자동차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인센티브 제공과 연비 규제 강화를 동시에 실시해서 전기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 (건물) 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서 3년 만에 저소득층 약 100만 가구에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 실시
- (인적자본) 친환경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인력을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하기 위한 직업훈련 실시
- 1천억 달러의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약 200만 개 일자리 창출 예상

미국의 그린뉴딜 재부상은 온실가스 감축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에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종합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필요성 제기

- 담론 차원에서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자원확보방안 포함)을 논의하는 한편, 기존 정책들을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재조합해서 구체적 추진전략 도출
-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평가에 기초해서 그린뉴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기후변화 인식을 높이고 대규모 재정투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
- 기존의 재정·에너지·교통·주택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혁신적으로 재배치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 필요

이 유 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 후 빈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1

2019년 그린뉴딜의 재부상

미국 민주당이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 결의안 의회에 제출

2019년 2월 최연소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를 포함해서 민주당 하원의원 64명과 상원의원 9명이 '그린뉴딜 결의안' 제출

- 📍 그린뉴딜은 환경과 경제의 상충관계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저탄소·친환경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 부양책(green stimulus)
- 📍 그린뉴딜 결의안은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제로(net zero)를 목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신재생에너지 100% 전력 생산 등 14개 부분의 국가적 목표 및 프로젝트 제안
- 📍 녹색산업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기후변화와 금융위기에서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고용보장과 소득증대 추구(민병길, 박원익 2019)

경제 전체에서 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14개 부분의 국가적 목표 및 프로젝트

- (A) 기상이변과 같은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로부터 회복력 구축
- (B) 미국의 인프라 시설을 기후변화 대응, 오염 및 온실가스 제거, 깨끗한 물 제공 차원에서 개선
- (C) 청정·재생·탄소배출제로 에너지를 통한 100% 전력 생산
- (D) 에너지 효율적이고 분산된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해서 합리적 가격으로 전기 사용 보장
- (E) 에너지효율을 최대치로 달성하도록 모든 기존 건물을 개량하고 신규 건물 건설
- (F) 청정제조업의 성장을 자극해서 제조업 및 산업에서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제거
- (G) 농민과 목장주가 협력해서 농업부문에서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제거
- (H) 수송시스템을 점검해서 수송부문에서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제거
- (I) 오염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 건강, 경제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관리
- (J) 토양 탄소 저장 기술로 자연생태계를 복원해서 대기로부터 온실가스를 제거하고 오염 감소
- (K) 생물다양성 및 기후회복력 지원사업으로 절멸 위기에 있는 취약한 생태계 복원 및 보호
- (L) 기존 유해폐기물 및 버려진 부지를 정화하고 그 부지에서 경제발전과 지속가능성 보장
- (M) 다른 배출 및 오염 원천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해결책 마련
- (N) 미국이 기후행동에서 국제적 리더로 나설 것을 지향하며, 기술·전문지식·제품·자원·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촉진하고, 다른 국가들이 그린뉴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

출처: H. Res.109(2019-2020 하원 결의안 109).

민주당의 예비 대선공약으로서 그린뉴딜 결의안은 미국 사회에서 논쟁 촉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뉴딜 결의안을 '사회주의'라고 비난한 가운데 실현가능성과 자원확보방안을 중심으로 논쟁이 가열되고 있고 향후 기후재난이 심해질수록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 증가 예상

- 📍 진보 성향의 한 시민단체(Data for Progress)는 2018년 9월에 그린뉴딜을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진보적 비전'으로 높게 평가(Carloak and Mangan 2018)
- 📍 반면 보수 성향의 한 일간지(New York Post)는 2019년 2월에 '오바마의 실패를 무시한 오카시오-코르테즈의 녹색 에너지 계획'이라는 제목의 사설 게재(Sharan 2019)
- 📍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온실가스 배출 제로와 수백만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린뉴딜을 위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논쟁의 핵심 사안
- 📍 이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최근 허리케인·산불과 같은 기후재난 피해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¹⁾ 트럼프 대통령의 반환경적 정책²⁾과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린뉴딜은 민주당에게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상당히 매력적임

오바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분석해서 한국 사회에 던지는 정책적 함의 도출

미국에서 그린뉴딜 담론의 재부상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음

- 📍 2019년 그린뉴딜 재부상은 기본적으로 과거 오바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기초하므로 그린뉴딜을 둘러싼 현재의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 오바마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한 분석 필요
- 📍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고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했지만, 4대강 사업과 원전확대에 중점을 둔 녹색성장 정책이 온실가스 저감과 경제활성화를 이끌었는지는 의문
- 📍 2019년 한국에게 온실가스 저감과 경제 활성화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서 파리기후협정³⁾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여야 하고 경기전망이 악화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 직면
- 📍 따라서 이 글은 오바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분석한 후 한국 사회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제시

1) 유권자의 상당수(73%)가 지구온난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절반 이상(59%)이 지구온난화가 대부분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초래된다고 인식(Leiserowitz, Maibach, and Roser-Renouf et al 2018, 7-8)

2)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자동차 연비규제 완화, 석탄발전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완화,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다수의 반환경적 정책 발표

3)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으로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 이내 상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시

2

오바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그린뉴딜 정책 실행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이후 공약으로 제시했던 그린뉴딜 정책을 금융위기에 대한 경기부양책으로 실행하는 한편 기후변화 입법이 좌절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으로 실행

- 2007년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은 1929년 대공황 시기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합의(New Deal)'를 제시했듯이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면서 경제체제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주장(Friedman 2007)
- 오바마 대통령 후보는 부시 정부의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비판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약속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전면에 내세운 그린뉴딜 논의를 공약으로 채택
-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 직후 서명한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은 경기부양책으로 역사상 최고액인 7,87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중 녹색산업 지원액이 941억 달러로 약 12% 차지(French, Renner and Gardner 2009, 8)
-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부결 등으로 기후변화 입법이 부재한 상태⁴⁾에서 2013년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발표 등 대통령 권한으로 그린뉴딜 정책 수행(박시원 2015)

그린뉴딜 정책은 에너지·수송·건물·인적자본의 4가지 핵심경제부문을 중점 지원

화석연료 의존성을 극복하고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에너지를 소비해서 사람과 물건을 수송하는 방식,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물 구조, 그리고 새로운 경제체제에 적합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적자본에 대한 대규모 사회적 투자 필요

- 오바마의 그린뉴딜 정책이 당시에 에너지·수송·건물·인적자본으로 구분해서 실시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 전체에 걸쳐 실시된 통합적 그린뉴딜 정책을 핵심경제부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방식은 정책의 세부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줌⁵⁾
- 수송·건물은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경제부문이고, 건물에서 낮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잠재성이 가장 큼(French, Renner and Gardner 2009, 10)

4)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은 2009년 하원 승인 후 2010년 상원에서 부결

5) 이와 같은 구분은 French, Renner and Gardner(2009)가 제시한 4가지 핵심경제부문(에너지·수송·건물·기초원료)에서 착안한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 실업사태라는 미국의 독특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해서 기초원료 대신 인적자본 고려

〈표 1〉 2009년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 중 그린뉴딜 관련 주요 지원

부 문	내 용	금 액
에너지	전력망 현대화와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신설	110억 달러
	에너지효율과 절약 부문 정액 교부금(block grant)	63억 달러
	신재생에너지 및 송전 사업 대출보증	60억 달러
수 송	철도 투자	93억 달러
	대중교통 투자	84억 달러
	차세대 배터리 체계(advanced battery system) 보조금	2억 달러
건 물	저소득층 가구 내후화(weatherization) 보조	50억 달러
	연방정부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45억 달러
인적자본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연구	25억 달러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직업훈련	5억 달러

자료 : French, Renner and Gardner 2009, 9에 기초해서 저자가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함.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보조금지급, 대출보증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과 ‘에너지정책법’에 근거해서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 대출보증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촉진(장현숙 2012, 102-105)

- ☉ 세제혜택: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세액공제(Business Energy Investment Tax Credit)는 태양에너지, 연료전지, 소형풍력 발전시설 투자에 대해 30% 세액공제, 지열발전과 마이크로터빈, 열병합발전 투자에 대해 10% 세액공제 제공, ② 신재생에너지 생산세액공제(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는 풍력·바이오매스·수력발전 등으로 150kW 이상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 단위전력 생산량당 설비비의 일정 금액 환급
- ☉ 보조금 지급: 재무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소유주에게 에너지원의 종류에 따라 설치비용의 30% 또는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태양에너지·연료전지·소형풍력발전시설 소유주는 30% 보조, 바이오매스·수력·지열 등 그 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소유주는 10% 보조
- ☉ 대출보증: 신기술은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민간금융기관이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에너지혁신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보증 프로그램 마련(Department of Energy's Loan Gurantee Program), 2,500만 달러 이상의 기술 프로젝트는 최대 80%까지 대출보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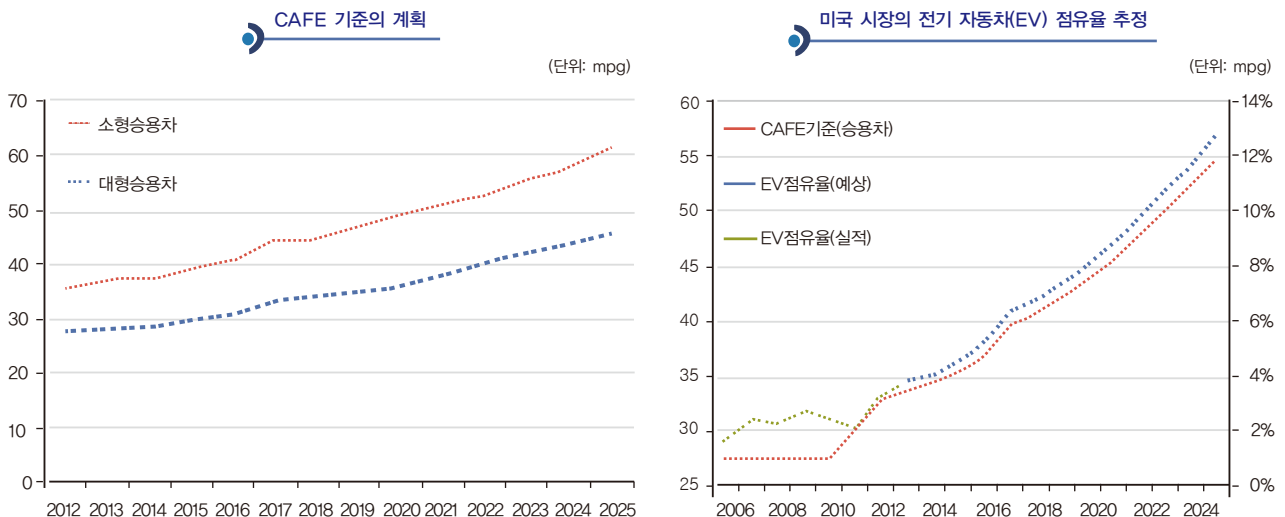
[수송]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강화를 통한 전기자동차산업 육성

2015년까지 전기자동차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인센티브 제공과 연비규제 강화를 동시에 실시해서 전기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 인센티브 제공: ① 소비자가 그린카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의 세제혜택 부여, ②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에 대해 24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첨단기술 자동차 제조 프로젝트(Advanced Technology Vehicle Manufacturing Project) 등 총 48개 프로젝트 수립 (최도영, 박찬국, 김수일 2012, 19-21)

📍 연비규제 강화: 차량 크기별로 다르지만 기업평균연비규제(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를 2016년 갤런당 35.5마일에서 2025년 54.5마일로 높이는 계획을 발표, 연비규제가 계획대로 실행되면 2025년 전기자동차 점유율이 12.7%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전승표 2014, 5)

〈그림 1〉 연비규제 강화와 전기자동차 점유율 증가



[건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내후화 보조사업⁶⁾ 확대

내후화 보조사업(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에 50억 달러의 예산 투입해 3년 만에 약 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 실시(Coggin 2016)

📍 정부가 저소득층 거주주택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해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 검사를 진행하고 건물 상태와 특성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주택개량방식(단열·창호 등) 선택해서 시행

6) 1973년 석유파동으로 석유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1976년 저소득층의 난방요금을 줄이기 위해 시작

[인적자본] 에너지 전문가 양성과 일자리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친환경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인력을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하기 위한 직업훈련 실시

📍 그린뉴딜 관련 일자리에에는 환경공학자처럼 새로운 전문직업도 있지만 건축장비 운전자, 지붕공, 토목기사와 같이 기존 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업들이 다수 포함(<표 2> 참고)

📍 2008년 경제위기로 타격을 입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실직 숙련 노동자들을 빠른 시간 내에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표 2〉 그린뉴딜 대표 일자리

녹색경제투자 전략	대표 일자리
건물 개조 (Building Retrofitting)	전기업자, 난방기/에어컨 설치업자, 목수, 건축장비 운전자, 지붕공, 절연업자, 목수 보조, 산업용 트럭운전자, 건설현장 관리자, 건물 검사관
대중교통/화물철도 (Mass Transit/Freight Rail)	토목기사, 철도 트랙 쌓는 사람, 전기업자, 용접공, 금속 조립공, 엔진 조립공, 버스 운전자, 배차원, 기관사, 철도 건축업자
지능형 전력망 (Smart Grid)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전기 엔지니어, 전기 장비 조립공, 전기 장비 기술자, 기계 운전자, 팀 어셈블리, 건축 현장 근로자, 운영 엔지니어, 전력선 설치자와 수리공
풍력 (Wind Power)	환경공학자, 철강업 종사자, 기계수리 기술자, 금속기술자, 기계 운전자, 전기장비 조립공, 건축 장비 운전자, 산업용 트럭 운전자, 산업생산 관리자, 일선 생산 감독관
태양광 (Solar Power)	전기 엔지니어, 전기업자, 산업 기계공, 용접공, 금속 조립공, 전기 장비 조립공, 건축 장비 운전자, 설치 보조, 근로자, 건축 현장 관리자
차세대 바이오연료 (Advanced Biofuels)	화학 엔지니어, 화학자, 화학 장비 운전자, 화학 기술자, 혼합 기계 운전자, 농업 분야 근로자, 산업용 트럭 운전자, 농장 생산 구매자, 농림업 감독관, 농업 검사관

출처: Pollin, Garrett-Peltier, Heintz and Scharber 2008, 6.

[일자리 창출] 1천억 달러 재정투입을 통해 약 200만 개 일자리 창출 예상

고용효과 추정 모형에서 동일한 금액(1천억 달러)을 석유산업(54만 개) 또는 가계소비(170만 개)에 투입했을 때보다 그린뉴딜의 고용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남(Pollin, Garrett-Peltier, Heintz and Scharber 2008, 9-11)

📍 직접 일자리: 그린뉴딜 관련 제조업 또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93만 5천개 일자리

📍 간접 일자리: 서비스업을 포함해서 직접 일자리 관련 산업의 58만 6천개 일자리

📍 유도 일자리: 그린뉴딜 고용 근로자 소비를 통해 발생하는 유통 분야 49만 6천개 일자리

3

그린뉴딜 정책의 성과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재정투입에 기초해서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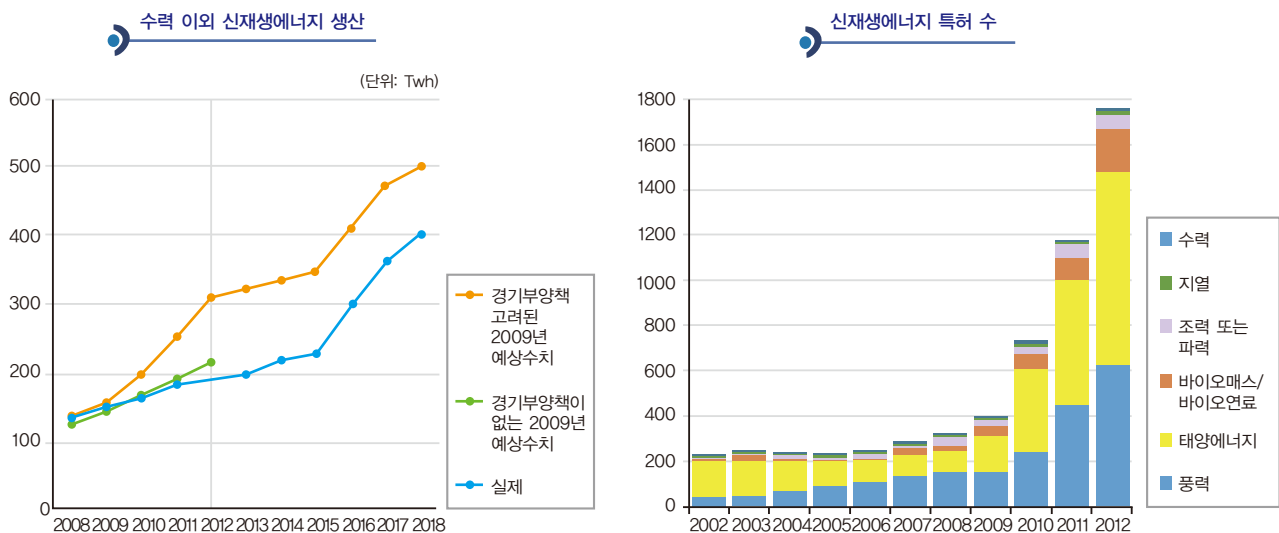
오바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재정투입에 기초해서 신재생에너지산업, 전기자동차산업, 건물에너지효율화 등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녹색일자리 창출

[에너지] 세제혜택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2008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생산 4배 증가

세제혜택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2009년 1월~2017년 1월)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 4배 이상 증가

- ❶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단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상승(유학식 2017, 58-59)
- ❷ 전력생산에서 풍력과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4%에서 2016년 6.5%로 증가했고, 특히 태양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이 2008년보다 2016년에 약 43배 증가(Jackson 2018)
- ❸ 신재생에너지 관련 경기부양책이 배출권거래제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예상했던 것만큼 아니지만, 에너지·환경·사회경제 측면에서 일정한 효과 발생(Mundace and Richter 2014)

〈그림 2〉 신재생에너지 관련 경기부양책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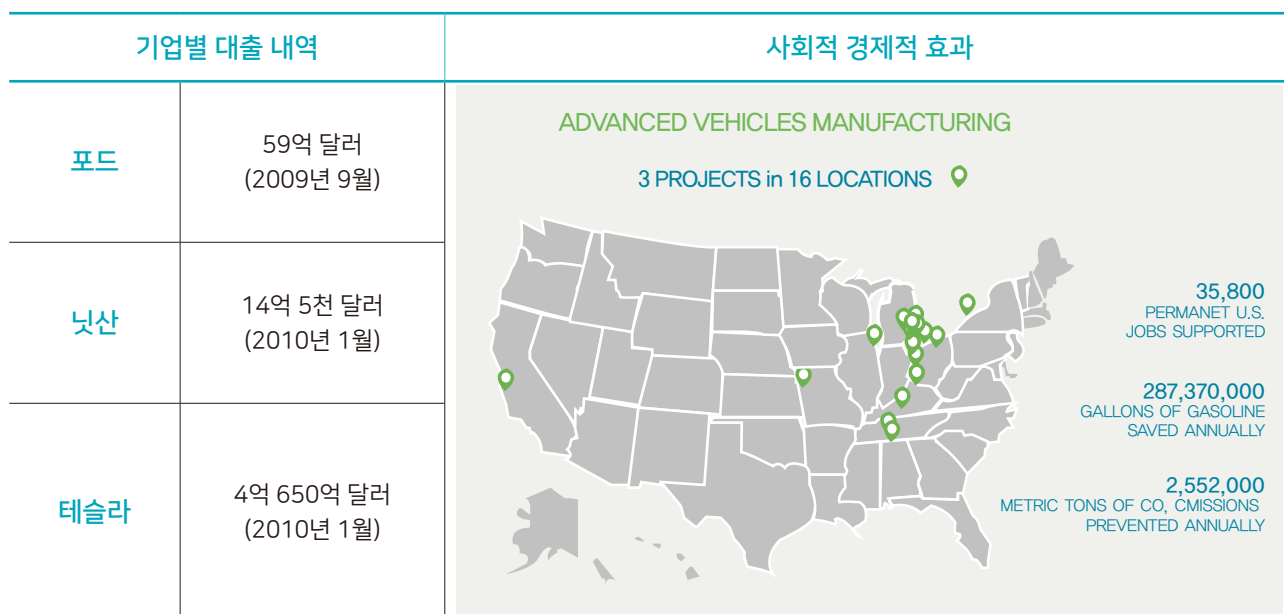
출처: Mundaca and Richter 2015, 1178-1179.

[수송] 연료효율적 첨단자동차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석유 절약, 탄소 배출 방지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첨단기술 자동차 제조 프로젝트는 3만 5,800개 일자리 창출, 연간 약 3억 갤런 석유를 절약, 연간 약 250만 메트릭톤의 CO₂ 배출 방지

미국에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포드(Ford), 닛산(Nissan), 테슬라(Tesla) 3개 자동차업체에게 2009년 9월과 2010년 1월에 총 78억 달러 이상의 직접대출 시행

〈그림 3〉 첨단기술 자동차 제조 프로젝트의 성과



출처: <https://www.energy.gov/lpo/advanced-vehicles-manufacturing-projects> (2019년 4월 25일 검색).

[건물] 에너지소비 감소,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가구소득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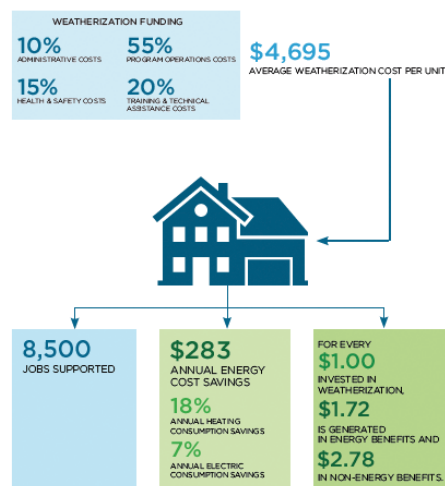
내후화 보조사업의 활성화는 에너지소비 감소,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가구소득 보전 등 다양한 정책효과 유발(DOE 2018)

매년 3만 5천 개 주택에 가구당 평균 4,695달러를 투입해 8,500개의 일자리를 창출, 가구당 평균 283달러 비용 감소

내후화 보조사업에 투입된 1달러는 에너지 편익으로 1.72달러, 비-에너지 편익으로 2.78달러 발생시켜 지역사회에 영향

이처럼 내후화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가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 발생

〈그림 4〉 내후화 보조사업의 정책효과



출처: DOE 2018.

[일자리 창출] 오바마 임기 중 일자리 증가,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에서 높은 고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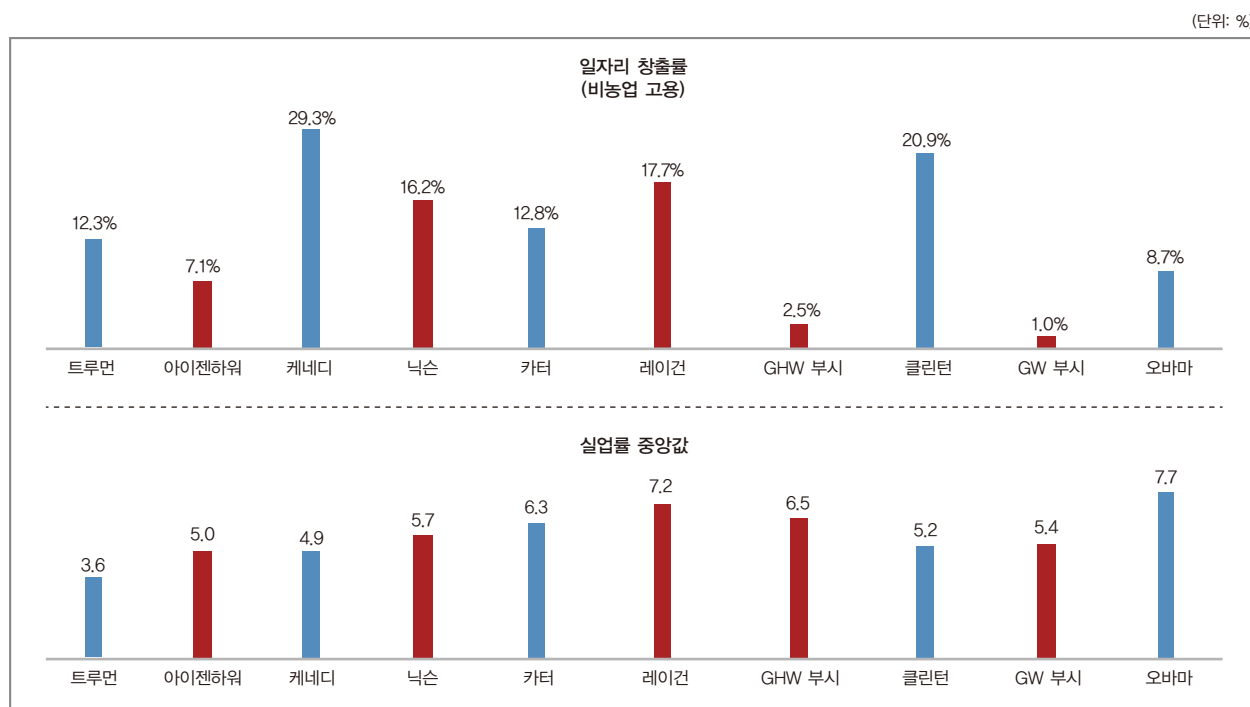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총 1,16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비농업 고용(nonfarm employment)에서 8.7% 증가(Jackson 2018)

2017년 기준 석탄연소기술 관련 산업 고용 인력은 9만 명인데 비해 저탄소배출기술 및 에너지효율 산업 고용 인력은 각각 80만 명과 225만 명으로 급성장, 특히 태양광 일자리는 지난 7년간 168% 성장했고 풍력발전 터빈 기술자는 가장 빨리 증가하는 직업 중 하나(Carlock and Mangan 2018, 16)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임했으므로, 실업률을 임기 중 낮췄다 해도, 임기 내 실업률 중앙값은 7.7%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정부보다 높아 오바마 정부의 고용창출 효과에는 상당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존재

그린뉴딜 정책의 고용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금융위기 이후라는 오바마 정부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한 후 녹색산업에 대한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했던 대로 녹색일 자리를 증가시켰는지, 이 과정에서 다른 부문의 일자리가 감소하지는 않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때 가능

〈그림 5〉 미국 정부별 일자리 창출과 전체 실업률



출처: Jackson 2017.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 미비와 2019년 그린뉴딜의 정치적 쟁점화

아직까지 오바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전반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현재 그린뉴딜 담론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종합 평가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책으로서 누구에게나 앞으로 더 중요한 핵심 과제

미국에서 그린뉴딜 담론의 재부상은 여러 가지 기후변화 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책 실행력이 높지 않은 한국에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종합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필요성 제기

-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와 압력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규제강화와 경제성 하락으로 인한 좌초자산화⁷⁾, 목표 미달성에 의한 대외신인도 하락과 수출 감소 등 경제적 피해 초래 가능
- 현재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제1차 기후변화 기본계획'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들을 마련했으나 온실가스 감축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실제 감축 수단을 실행하기 힘들다는 점⁸⁾에서 나타나듯이 정책 실행력이 높지 않은 상태
- 그린뉴딜은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핵심경제부문인 수송·건물·인적자본의 전환을 추구하는 포괄적 정책이지만, 한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낮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제 전체에 걸쳐 대규모 재정투입을 단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그린뉴딜 담론 재설정과 단기 실행전략 강구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담론 차원에서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논의하는 한편 기존 정책들을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재조합해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추진전략 도출

- 한국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의 성과분석 필요
- 사회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마련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규모 재정투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
- 그린뉴딜 담론 재설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재정·에너지·교통·주택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혁신적으로 재배치해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 필요
- 특히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해서 정책부문별로 나뉘진 정부부처 사이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7) 석탄화력발전을 현재처럼 운영하다가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40년에 갑자기 중단하면 한국은 분석대상 34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1,060억 달러 (108조 원) 손실액 발생(중앙일보 2019년 3월 14일자)

8) 실제 감축 수단을 실행하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발전·산업), 국토교통부(수송·건물) 등

참고문헌

- 문진영, 이성희. 2014. 최근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14, no. 6.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민병길, 박원익. 2019. 미국 오카시오-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의 정책적 시사점. 이슈&진단 no. 364. 경기: 경기연구원.
- 박시원. 2015.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환경법연구* 37권, 1호: 207-248.
- 유학식. 2017.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시사점.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 장현숙. 2012.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전략. *에너지포커스* 가을호, 101-116.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 전승표. 2014. 전기 자동차(고연비 그린 자동차) - 누가 연비 경쟁을 시키고 있을까? 시장보고서 Vol. 4, Issue 7.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중앙일보. 2019. 韓 지금처럼 석탄 발전시 '좌초자산' 손실액 세계1위. 3월 14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410492> (2019년 4월 26일 검색).
- 최도영, 박찬국, 김수일. 2012. 전기자동차 보급의 에너지수급 영향 분석.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 Carlock, G. and Mangan, E. 2018. A Green New Deal – A Progressive Vision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Economic Stability. http://filesforprogress.org/pdfs/Green_New_Deal.pdf (accessed April 25, 2019).
- John Coggin. 2016. National Weatherization Network Celebrates 40 Years of Service. <https://www.energy.gov/eere/articles/national-weatherization-network-celebrates-40-years-service> (accessed April 25, 2019).
- DOE(Department of Energy). 2018. Weatherization Works! https://www.energy.gov/sites/prod/files/2018/03/f49/WAP-fact-sheet_final.pdf (accessed April 25, 2019).
- French, H., Renner, M. and Gardner, G. 2009. Toward a Transatlantic Green New Deal: Tackling the Climate and Economic Crises. Heinrich Böll Stiftung Publication Series on Ecology Vol. 3.
- Friedman, T. 2007. A Warning from the Garden. January 19, <https://www.nytimes.com/2007/01/19/opinion/19friedman.html> (accessed April 25, 2019).
- H. RES.109 – Recognizing the duty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reate a Green New Deal.
- Jackson, B. 2018. Obama's Final Numbers – Statistical Indicators of President Obama's eight years in office, <https://www.factcheck.org/2017/09/obamas-final-numbers/> (accessed April 25, 2019).
- Leiserowitz, A., Maibach, E., Roser-Renouf, C., Rosenthal, S., Cutler, M. and Kotcher, J. 2018. *Politics & Global Warming, March 2018*. CT: Yale Program on Climate Change Communication.
- Mundaca, L. and Richter, J. 2015. Assessing 'Green Energy Economy' Stimulus Packages: Evidence from the U.S. Programs Targeting Renewable Energy.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42: 1174-1186.
- Pollin, R., Garrett-Peltier, H., Heintz, J. and Scharber, H. 2008. *Green Recovery – A Program to Create Good Jobs and Start Building a Low-Carbon Economy*. NY: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 Sharan, S. 2019. Ocasio-Cortez's Green Energy Plan Ignores Obama's Failures. February 9, <https://nypost.com/2019/02/09/ocasio-cortezs-green-energy-plan-ignores-obamas-failures/> (accessed April 25, 2019).
- U.S. Department of Energy. <https://www.energy.gov/lpo/advanced-vehicles-manufacturing-projects> (accessed April 25, 2019).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leeyujin2010@gmail.com)

이후빈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hblee@krihs.re.kr, 044-960-0276)